

2021 업무계획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 1. 26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①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

-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4.9~)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5.20~),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3.5) 등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학습환경 제공



※ 초·중·고 원격수업 설문조사(20.10~11)

- 초·중·고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 제공, 공공 학습 관리시스템(LMS)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에 긴급 재정 지원(1,000억원)

※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지원('20.8 기준 24.3만명), 교원 노후PC 20만대 신규 교체,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각 일 300만명 이용 가능) 및 모바일 무상이용 지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및 원격학습도우미(9,700명)를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교육 부담 완화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19시까지 돌봄 운영 및 모든 참여학생에게 중식 제공
참여 학생수 : [유치원] 약 24만명('20.5 기준), [초등학교] 약 20만명('20.9 기준)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통해 초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학교 내 전파 차단

* (입국 전) 입국 시기 조정 →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 운영 → (입국 후) 대학·지자체 모니터링

** ('20.3) 초·중·고 학생 중심 웹서비스 개시 → ('20.9)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모바일 앱 → ('20.11) 학원·교습소 강사까지 사용 확대

-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 보장(확진자 41명 및 격리자 456명 응시,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음)

※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증가),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 증가), 관리·감독관 120,708명(전년대비 21,781명, 22% 증원), 확진자 병상 205개 확보

※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서 수능 실시 및 학교 방역조치 사항 보도('20.12)

③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입 사전예고제(4년 전 공표) 등 규정을 신설('고등교육법' 개정, '19.4)하여 대입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18학년도 5.5% → '21학년도 4.3%),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23학년도)
 - * 학종과 논술전형 쓸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 / 16교 중 9교는 '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기 반영하여 조기 달성
 - ※ 고교·학생 정보 블라인드 평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마련, 공공 사정관 도입 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개선
- 개교 아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16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20. 9교)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사학 투명성 제고
 - * 법률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
 - 시행령 등 : 회계부정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19~) 및 '25년 자사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완화 유도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20.2)
 - ** 고입 경쟁률('18 → '20) : [자사고] 1.46 → 1.31:1, [외고] 1.57 → 1.49:1, [국제고] 2.29 → 1.97:1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마련
 - * 사립교원 징계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준용, 관할청 징계 요구시 사립학교 이행 의무화 등
 - **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감축('20. 20~40일), 학교 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등

④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20.3) 및 단계적 시행^{*} 계획 수립
 -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5) 전면 시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20. 732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20. 온라인 809개, 오프라인 3,425개)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 ※ 선택 가능 과목수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전 30과목 → 운영 후 50과목(1.7배)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 5.3과목 → 도입 후 12.1과목(2.3배)

- 국립대학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지역인재 양성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의 교육·연구를 선도하도록 유도
 -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6,266천원 → ('19) 17,387천원
 - 국립대학 기회균형선발 학생 비율 : ('17) 13.9% → ('19) 14.4% → ('20) 15.1%
-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을 산학협력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 강화



- 4단계 두뇌한국21('20~'27. BK21)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확대 (68개 대학, 578개 교육연구단(팀), 대학원 혁신 20개 대학)
 - ※ 3단계 → 4단계 : [지원규모] 연 17,000명 → 연 19,000명, [월 지원금] 석사 60만원 → 70만원, 박사 100만원 → 130만원, 신진연구인력 250만원 → 300만원 이상

⑥ 포용국가 사회정책 수립·추진

- 12개 부처 합동으로 현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제를 발표('18.9),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로드맵('19.2)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

사회통합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완화 ▪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 ▪ 고용안전망 구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공정사회 구현, 성범죄 근절 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로 정책 협력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 :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 사회분야 공정성 제고 방안('20.10) : 표준계약서 확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개최수, 안건수 : ('18) 13회, 35건 → ('20) 22회, 60건 / 방통위·권익위 등 참여기관 확대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코로나19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학교·교육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확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시도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공간 등 혁신 요구 예상
 - 이와 함께, 원격수업 상황이 2년째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에 대한 획기적 대응책 마련 요구 증대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 지식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직업군 변화, 기존 학위·자격의 효용성 상실 등
 -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첨단분야 일자리 수요 증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개인의 역량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학교·대학 역할 강조
 - * 비수도권 → 수도권 인구 순이동 중 20대 78.9%('19. 균형발전 모니터링)
 - ※ 수도권 인구(만명) : ('00) 2,175 → ('10) 2,443 → ('20) 2,596 → ('30) 2,648
지역 인구(만명) : ('00) 2,526 → ('10) 2,512 → ('20) 2,582 → ('30) 2,545
- 사회의 다양성·복잡성 증가에 따라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①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 지원
- ②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 ③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한층 더 강화

III.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 ◆ 준비된 방역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교육의 회복탄력성 제고

□ 철저한 방역안전망으로 배움의 일상 회복

- (학사운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대상별 등교수업일 확대* 추진
* (등교 우선 원칙과 지원)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우선 등교 추진, 이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방역 인력 배치를 우선 지원
- (학교방역) 방역물품 비축(학생 1인당 마스크 5매, 손소독제 교실당 3개 이상 등) 및 관계기관 핫라인 유지, 24시간 대응상황반 가동 등※ 개학 전 방역 물품인력 점검 및 자가진단 재개, 개학 후 1~2주 특별 모니터링 기간 운영
- (과밀학급 해소) 방역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정비 추진
*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모듈러교사,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학습안전망을 통한 집중 학습 지원

- (초등 저학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 대상 집중 지원으로 학습격차 완화 및 방역상 안전 확보
※ 초등 1~3학년 30명 이상 학급 수(추계) : 총 2,296개 / 1학년 620개, 2학년 794개, 3학년 882개('21년 시도 학생수용계획 기준, '20.12)
 -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수업* 실시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급 증설 등을 위해 약 2,000명 교사** 인력 지원
- * 수업에 추가 지도인력(교원·강사·예비교원 등)을 배치하여 소그룹 활동, 즉각적인 보충지도 등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 / ** 기간제교원 한시 활용

- (교직원) 방역·돌봄·자살사안 발생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
 * 대면·비대면 교육훈련 등 : ('20) 약 2.1만명 → ('21) 약 10만명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안전망

-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21. 500학급 확충) 및 참여대상 유아 확대, 운영시간 다양화(아침, 저녁, 온종일 등)를 통해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0인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단독배치 및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개원 공동관리('21.1.30~) 등 유아 먹거리 안전 확보
 -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경험을 반영한 미래형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연구·시범유치원(약 36개원) 운영
 ※ 놀이꾸러미 활용 원격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현장지원자료(5종), 교육콘텐츠(80개) 개발
- (온종일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학교돌봄터 사업, '21.9), 초등 돌봄교실(700실) 및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으로 **45.9만명** 돌봄 제공
 *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교실을 제공('21~'22. 총 1,500실, 약 3만명 학생 지원)
 -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통^{*}('21.下), 학부모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돌봄 질 제고^{**} 추진('21.上)
 - * (기 완료) 마을돌봄 → ('21.1) 초등돌봄교실 → ('21.下) 학교돌봄터 사업
 - ** 교원의 돌봄행정업무 경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초등돌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장애학생)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 대학 및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기능을 포함한 교육활동 지원
 ※ 특수학급의 돌봄 및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학 연계 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21.3~)

□ 교육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원

- (위기아동·청소년) 대면·비대면 예비소집^{*}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 (~'21.1) 예비소집 → ('21.1~) 소재 미확인 아동 즉각 경찰 수사 요청 → ('21.3~) 입학단계 이중점검 / **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 신고 등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

- ◆ 코로나 이후 시대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업 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완비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소통 확대

- (소통 강화) 원격수업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수업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 및 흥미도 제고
 - * 실시간 쌍방향 단독,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에서 실시간 채팅, 조·종례 등 다양한 피드백 활성화
- (기반 조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21.2)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수업 중 퀴즈 및 풀이결과 제시, 손들기-발언권 부여, 모둠토의 등 기능 추가

□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과감한 규제혁신

- (법 제정) 원격수업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추진('21.上~)
 - * 원격교육 정의, 운영기준, 학교 내 교육과의 연계, 진흥·협력, 통계조사, 저작물 이용 등
- (교육과정)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21.2)하여 학생의 성취수준, 학습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원격수업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교과별 성취기준 통합 등 주요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하게 조정 가능
 - '20학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규제를 폐지^{*}('21.3)하고,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등 운영 허용('21.2학기)
 - *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20%),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 등 폐지
- (평가) 평가 일정, 횟수 조정 등 단위학교의 평가 자율권 보장, 중·고교 전 교과에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를 허용하여 평가 부담 완화
 - * ('20) 기초·탐구교과(군) 제외 → ('21) 전 교과(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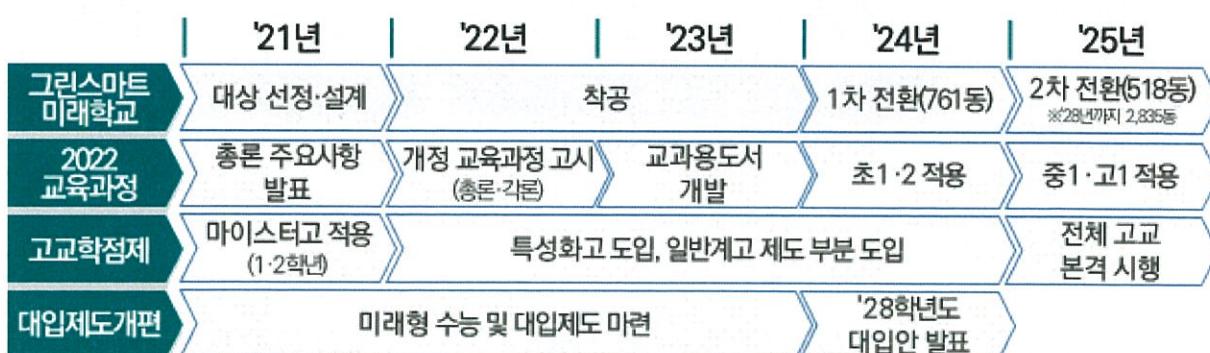
①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 ◆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 정립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교원 양성체제 개편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 교육혁신의 기반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 (미래학교)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의 전환 추진
 - ※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 교육청과 함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추진한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 도출('21.2. 비전 선포)
 - * (교육부) 학교단위 : ('19) 57교 선정 → ('20~) 기획·설계·공사 → ('21) 순천별량중 등 12교 완성 → ('22~'25) 45개교 단계적 완성 / 교실단위 : ('19) 588교 → ('20) 618교
 - (교육청) 서울 미담학교, 부산 별별공간, 충남 감성꿈틀 등 자체 추진(전북 덕과초, '21.완성)
 -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 전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미래학교 전환학교를 선정하고, 모델 확산('21~)
- (인프라) 유·초·중·고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 구축(~'23)
 -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1.6) 및 예비타당성 조사('21) 실시

미래학교 전환 추진 로드맵 (안)



- (미래형 대입)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8학년도 적용) 논의 착수

□ 미래 변화를 선도할 인공지능(AI) · 환경생태교육

- (인공지능교육) 초·중·고 인공지능 내용 기준 마련('21.3), 고교 선택 과목 적용('21.2학기 2종) 등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단계적 도입
 -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및 거점형 일반고^{*}를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실시
 - * AI선도학교: ('20) 247교 → ('21) 500교 / 거점형 일반고: ('20) 34교 → ('21) 51교
 - ** 교원양성대학 지원('21~'23. 5교), 교육대학원 융합과정('21. 1,000명)
- (환경생태교육) 교육과정 목표 및 교육내용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반영하고, 교원 역량 제고^{*} 추진
 - * 유·초·중등교원 대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원격 연수 개설 추진('21.上)
 - ※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지원 방안」 수립('21.4분기)
 - 학교환경교육 전담기관 지정 및 플랫폼((가칭)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관계기관과 탄소중립 실천행동 협업 강화^{*}
 - * 기후행동 1.5°C 앱 운영(환경부 협업), 심리방역 생태교육(대전), 기후위기대응센터(울산) 등

□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수급모델 개발

- (양성체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교원의 다교과 역량, 현장 적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양성체제 개편('21.7. 발전방안 수립)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안) >

- | |
|---|
| ■ (현장 적합성) 교육실습 내실화, 현장 교원 강의 참여 확대, 인·적성 검증 강화 등 |
| ■ (미래 대응) 다교과 지도 역량 함양, 교육대학원의 재교육 기능 강화 |
| ■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다양화, 예비교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개선 추진 |
| ■ (중등교원 양성) 교과 특성에 따른 양성 경로 정비 및 교원 양성규모 감축 |

※ 예비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21.2) 및 사회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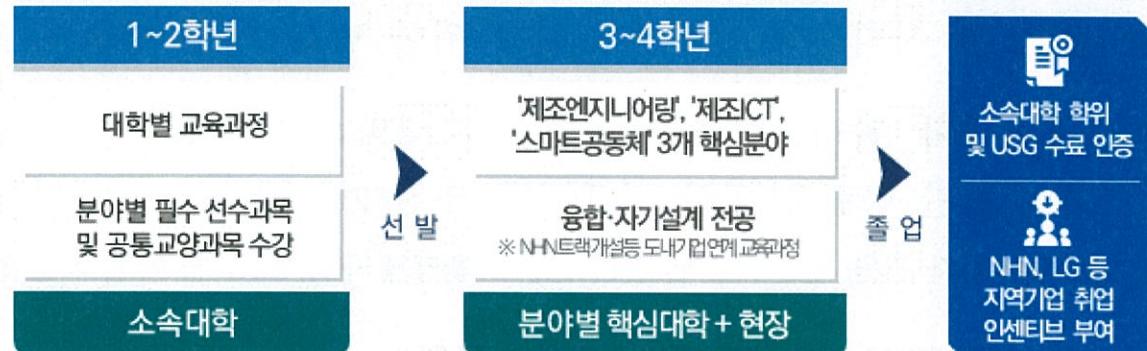
- (교원수급) 미래 학교 및 교사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모델 마련('21.下)
 - ※ ('21)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개발 → ('22) 교원수급계획 수립

□ 지역 혁신 ·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

- (지자체-대학 협력 지원) 지역 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지자체,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확대·안착 지원
※ ('20) 경남,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 → ('21) 4개 지역(신규 1개 추가)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지역대학 교육혁신사례(경남USG 공유대학)

- 경남 17개 대학이 함께 3개 핵심분야의 USG(University of Gyeongnam) 공동교육과정 운영
 - ('21.1학기) 공통교양 교육과정 개시 → ('21.2학기) 융합·자기설계전공 개시



※ USG PASS CARD 발급: 선발 학생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지원하여 이동수업 부담 완화

- (국립대 육성)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 확대 및 재정 확충 추진
※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1.上)

□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 (인문사회)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예산 확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체계 구축 및 학술전담기관 설치 등 기반 강화 추진
- (학술기반) 신진연구자의 단절 없는 연구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국제학술 DB 구독 확대('20. 39종→'21. 48종)
※ 신진연구자 : ('20) 3,080억원→('21) 3,667억원 / 대학연구소 : ('20) 1,834억원→('21) 2,520억원

③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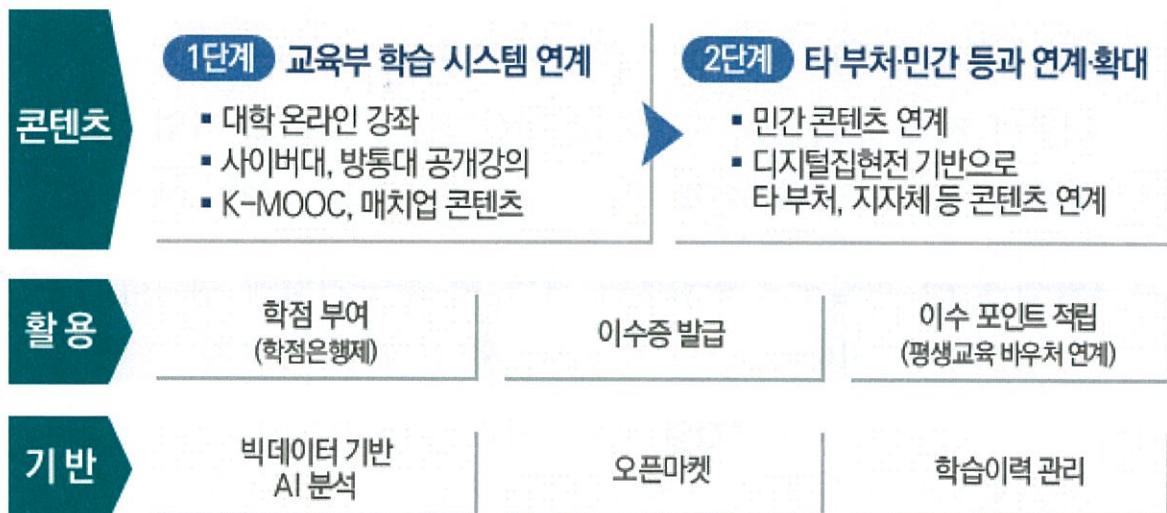
-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학-평생학습-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 산업계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직무 역량 개발 지원

□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평생배움터)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훈련 플랫폼을 연계하고, 학습 경로 설계부터 학점·학위 취득 및 취업까지 연계 지원

※ ('21) ISP → ('22) 교육부 평생학습 시스템 통합(K-MOOC, 매치업, 평생학습계좌제 등)
→ ('22~) 디지털집현전 및 타 부처·지자체 평생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

평생배움터(안)



- (K-MOOC 고도화) 국내·외 석학 강좌, 신기술분야 강좌 등 우수 콘텐츠 제공('21. 170개), 인공지능 기반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강좌 추천 서비스, 학습 활동과 연계한 마일리지 제도, 온라인 토론 및 실습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한 강좌 등 도입('21. 下)

◆ 코로나19 이후 변화충격에 대비하는 사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누구나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

□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해 안전사회 구축

- (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 전시군구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21.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上) 등을 통한 전방위적 학대방지 체제 구축
 - *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정보 공유,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 등 추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출입범위 확대 등
- (성범죄 근절) 「스토킹 처벌법」 제정,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성범죄 근절 노력 지속
 - *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 (어린이안전) 신종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책과 '이용시설, 보건·위생, 정신·신체건강, 교통, 식생활'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 특혜·불공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공정사회 구현

- (채용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 채용시 필기·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확산
 - *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특성(상시·지속성 등)을 사전검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 (공정한 입시)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서울 소재 16교), 논술·특기자(어학 등) 전형 축소 유도,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등
- (예술·체육 공정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확산·열정페이 업종 조사 등 실시, 스포츠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체육계 비리 근절
- (양형기준 개선) 아동학대·성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고려해 법원에 양형기준 상향 및 양형위 구성 개선 요청
 - ※ 범죄심리학 등 법학 인접분야, 경찰, 교정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으로 포용사회 내실화

-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주거·보건의료·복지서비스)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I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습지원	학생 정서안정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
 <p>교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3월 신설</p>	 <p>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17개 지정·운영 대학생 심리·정서지원 (상반기)</p>	 <p>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19) 22만원 → (20) 20만원 (21) 26만원 학자금 대출금리 (20) 1.85% → (21) 1.7%</p>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사-학생간 소통 확대	원격수업 규제혁신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채팅, 조·종례 등 소통 활성화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서비스 전면 개통(2월) 	 <p>단역적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2월) 원격수업 비율 대학 20% 상한 폐지(1학기)</p>	 <p>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020년 10개 → 2021년 28개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 구축 ※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공개</p>	 <p>초·중등 교실 25.2만실 기기급 무선망 구축 교원용 수업자료 제작 플랫폼 시범 운영 (3월~)</p>

미래학교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모델학교 12교 완성 <small>* 25년까지 57교 단계적 완성</small> 761동 전환 시작 <small>* 28년까지 2,835동 전환 완료</small>	 <p>'21년 하반기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1년 온·오프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 학생·학부모·교사 상시 힘의 대화 구성</p>	 <p>マイ스터고 학점제 확대 2020년 1학년 → 2021년 1·2학년 '22년 일반계 고부분도입 특성화고 전면 도입 준비 연구·선도 학교 20년 일반계 542교, 특성화고 208교 21년 일반계 936교, 전면 특성화고 520교</p>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첨단 분야 학과	지역 혁신 플랫폼	학술 진흥 상태계 구축
 <p>48교 신규 지원 (21년, 832억원)</p>	 <p>대학 내 45교 정원 증원 16교 학과 신설 (21학년도) 대학 간 공동 학과 설치 협약(2월)</p>	 <p>2020년 3개 플랫폼 (경남·충북·광주전남) 2021년 1개 플랫폼 추가 (21년 1,710억원)</p>	 <p>학술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학 연구소 지원(21년 2,520억원) 신진 연구자 지원(21년 3,667억원)</p>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マイ스터대	고졸 취업 활성화
 <p>평생배움터 •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연계 • 학점·학위 취득 및 취업까지 연계</p>	 <p>고속전 전문인재 양성 전문대학 석사과정 도입 5교 신규 지원 (21년, 100억원)</p>	 <p>직업교육 혁신지구 5개 신설 • 고졸 일자리 DB 구축</p>

1.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해 안전사회 구축	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 시·군·구 배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② 스토킹 처벌법 제정,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③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① 공공기관 필기·구조화된 면접 채용,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② 정시 40% 이상 확대(서울소재 16개교),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 유도,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③ 표준계약서 확산, 열정페이 업종 조사, 체육계 비리 근절 ④ 아동학대·성범죄 등 특정범죄 양형기준 상향 및 양형위 구성 개선 요청	
2. 특혜·불공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공정사회 구현	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②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방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① 인공지능+BIG3 인재양성 방안 ② 고등·평생직업교육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대학재정지원 정책 및 정원제도 조정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① (가칭)디지털 포용법 제정,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 제정 ②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 조성, 플라스틱 저감·음식물폐기물·공공폐자원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과제 추진(지역활력 증진, 노인대상 평생교육,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6.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속 ② 유·초중등분야 시도교육청 이양 지속 추진, 학교자치 강화, 지역교육 생태계 확장 ③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